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2호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별표).

나. 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공직자등”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임직원을 포함하여 정함  
(안 제2조나목).

라. 이중 포상금 수령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7호).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공무원 등”을 “공직자등”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조리신고”를 각각 “부조리 행위 신고”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공직자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3.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등과 시민은”을 “누구든지 이 조례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공무원등”을 각각 “공직자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금품수수”를 “금품등의 수수”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제1항 관련)

### 1. 지급기준별 포상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기준	포상금액
1	제2조제2호 가목	금품등 수수금액 또는 그 가액	· 금품등 수수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2호 나목	추징 또는 환수결정 금액	· 추징 또는 환수결정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3	제2조제2호 다목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킨 기여도	· 알선·청탁행위로 제공된 금품등의 10배 이내

###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가. 금품등 수수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나. 추징환수금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대전광역시 또는 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란 대전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
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	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업	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	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직자등...부조리 행위 신고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		
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	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			
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현행	개정안
<p>나.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p> <p>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p>	<p>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p> <p>나. 공직자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p> <p>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p>
<p>제3조(신고방법) ①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등과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무원비리 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신고방법) ①누구든지 이 조례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불문경고·경고·훈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급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 ..... ... <u>공직자등</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금 지급제외) (생략)	제10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7.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u>
7. (생략)	8.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  
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  
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김 경 수		
2	공 대 욱		
3	개 동 대	개동대	
4	정 기 현	정기현	
5	박 지 현	박지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